

백영웅 한국여성연구원 이사장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화 통계'에 의하면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를 넘어지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로,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속도는 세계최고속도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령화추세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생률 감소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감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여러이웃 고령화개 '사회적 재앙'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는것도 고령화의 경제위와 한수 관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30여년전 영국에 발표된 인구통계가 세계 최대의 호황으로 기록되면서 폴 에릭의 세계 베스트 셀러인 '인구폭탄(1968)'에서 젊은이들로 지구가 넘쳐나도록 되어있던 사회는 36년대를 지각적인 인구증가의 속도가 급격으로 감소하면서 지금은 고령화들로 지구가 재채기할것을 걱정하고 있다. 세계는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국민이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회 노령화문제를 위한 세계대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 10명당 1명이 60세 이상 노인이 2050년에는 5명당 1명, 2150년에는 3명당 1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큰일이 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에게는 현재 진행중인 세계인구의 노령화추세는 또다른 수 없이 인류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노년층을 초래 할것으로 예측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차에 대통령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두고 대책방안연구에 나섰는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커다란 문제해결을 위한 36개 분야를 담당하는 범부처적인 노령을 주도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거국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늦은감이 있는데 우리나라 노령으로 당면할 위기를 모면해야 할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경제의 지속가능성발전과 노인복지도 물론 사회안정적 요소로서의 고령화사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것은 한때 정부 출범이후 노인들을 치레하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 52.4세였던 우리 평균수명이 그후 40년사이 74세로 되면서 노인들의 삶이 20여년은 늘어났다. '하노크 옴므'라는 유럽어가 통용되기까지 세계 경제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상불가 일각 일출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4050세대들은 경제위기를 예상해도 6070세대를 다룬 사회정책 불만으로 인한 배제되고 있다.

노년들은 자기 평생의 생애에서 정년퇴직을 했음에도 21세기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애초를 겪고 있다고 한다. 젊어서는 못마땅이 못하든 노인들에게는 무척같이 더운 큰가 되려이다. 만약 생계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이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 4050세대가 허니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사회문제는 느려진 평균수명이 부담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다.

노년들은 젊을때 끼게 일거리로 노년까지 활동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로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노인들의 80여 인생의 인생의 일인 여가 20년간의 삶을 보람있게 살게 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들의 지능발달의 감지해 영려 하기 위한 정책에서 지적한 방안이 요구된다. ①

회귀후의 2012년 1월 1일은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2012년 부터가 지금까지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아 내실하는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한 사람의 삶이 행복하려면 자신의 내면의 단계를 먼저 다스려야 한다.

예컨대 360도의 삶의 양상을 어떻게든 구분하고 있다.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능과 관능을 살리는 일까지를 찾아 계속 일하는 것, 취미생활을 만끽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 등의 기진것을 바꾸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삶의 본질을 찾는 행이다.

최근 6070세대들은 이제부터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취하는 신종업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신종업종 중에는 다양하게 합쳐져 이사회가 더욱 기쁨과 행복을 보장한다. 이들이 지내고 있는 생활 리듬과 생활 방식을 어지간히 알지 못하면 이 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큰 지능이다.

물론 360도 이 지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이다. 고령화사회를 경험하는 360도 세대들을 지레 지게 하는 분위기를 리얼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혜 그리고

노령화 추세는 대개 65세 이상 인구가 10%를 넘어서면 노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7%를 넘어서면서 노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령화 사회

12.1 114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가운데 어떤 이는 고령화가 '사회적 재앙'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가 경제와 가지는 함수관계 때문이라 한다.

30여 년 전 역제 불가능한 인구증가가 세계의 미래에 큰 위협으로 지목되면서 폴 에릭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인구폭탄(1968)'에서 젊은이들로 지구가 넘쳐날 것으로 예언한 바와는 정반대로 지구적인 인구증가의 속도가 극적으로 감소하면서 지금은 고령자들로 지구가 채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세계는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유엔이 2002년 4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노령화문제를 위한 세계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 10명당 1명인 60세 이상 노인이 2050년에는 5명당 1명, 2150년에는 3명당 1명으로, 젊은 세대에게 큰 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엔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영향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령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두고 대비책 강구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거국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배전의 노력으로 닥쳐올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 안정책으로서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람들이 지레 늙게 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52.4세였던 우리의 평균수명이 그 후 40년 사이에 74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20여년 늘어났다. 그러나 '사오정' '오륙도'라는 유행어가 통용될 정도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예상보다 일찍 익숙한 일터에서 밀려난 4050세대들은 정년퇴직을 예상했던 6070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불안요인을 배태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생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젊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이 더욱 크기 마련이다. 아직 생계를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4050세대가 늙은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 사회분위기라면 늘어난 평균수명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거리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를 위한 다

필요한

72

224를 105로 나누는 몫은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린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30여 년 전 인구폭증이 세계의 미래에 큰 위협으로 지목되면서 폴 에릭이 그의 저서 '인구폭탄(1968)'에서 젊은이들로 지구가 넘쳐날 것으로 예언한 바와는 정반대로 지금은 고령자들로 지구가 채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세계는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유엔이 2002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노령화문제를 위한 세계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 10명당 1명인 60세 이상 노인이 2050년에는 5명당 1명, 2150년에는 3명당 1명으로, 젊은 세대에게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8.6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2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두고 대책 강구에 나섰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거국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배전의 노력으로 닥쳐올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 안정책으로서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레 늙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52.4세였던 우리의 평균수명이 그 후 40년 사이에 74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20여년 늘어났다. 그러나 늘어난 수명을 반기기에 앞서 아직 생계를 책임져야 하지만 예상보다 빨리 일터에서 밀려난 4050세대들은 더 길어진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해야 한다.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생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젊었을 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력감이 더욱 크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거리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에 다른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80년 인생의 마지막 20년간의 삶을 보람 있게 살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퇴직 후의 20년의 삶 이것은 '남은 생'으로서 덤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

어떤 이는 정년 후의 삶의 양식을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형, 재능과 관록을 살리는 일거리를 찾아 계속 일하는 형, 취미생활을 만끽하는 형, 그리고 자원봉사 또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형이다.

$\frac{2}{\sqrt{e}}$

지리봉(이길도) 여의치 않으리 상항 애사

3월 1일 (3) 04-10-20

Final

10.6

고령화 사회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10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019년에 고령사회(14.4%),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가 될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하는데 각각 115년과 40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19년과 7년이라는 고령화 속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급격한 출산을 감소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문제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30여 년 전 인구폭증이 세계의 미래에 큰 위협으로 지목되면서 폴 에릭이 그의 저서 '인구폭탄(1968)'에서 젊은이들로 지구가 넘쳐날 것으로 예언한 바와는 정반대로 지금은 고령자들로 지구가 채워질 것을 걱정하고 있다. 세계는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다.

유엔이 2002년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차 노령화문제 세계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면 현재 10명당 1명인 60세 이상 노인이 2050년에는 5명당 1명, 2150년에는 3명당 1명으로, 노인이 젊은 세대에 비해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생산가능인구(15-64세) 8.6명이 1명의 노인을, 그리고 2020년에는 2.8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엔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세계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되돌릴 수 없으며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로 인간의 삶의 모든 부문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직속으로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를 두고 대비책 강구에 나섰으며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범부처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다른 나라들에서 거국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여 이미 실행하고 있는데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배전의 노력으로 닥쳐올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 안정책으로서의 고령화 사회를 위한 대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사오정 오륙도'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레 늙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에는 52.4세였던 우리의 평균수명이 그 후 40년 사이에 74세가 되면서 사람들의 삶은 20여년 늘어났다. 앞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주기가 더욱 짧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의거하여 우리들이 90세 이상까지 산다고 한다면 6070세대들은 20~30년간, 4050세대들은 40~50년간의 후기의 삶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자기 평생의 생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을 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친다고 한다. 젊었을 때 미리 생각조차 못하고 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일거리와 소일거리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그에 따른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다.

퇴직 후의 삶, 이것은 '남은 생'으로서 덤으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때부터가 의무감이나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보람을 찾아 내실 있는 '진짜 삶'을 사는 것이다.

정년 후의 삶의 양식은 목적 없이 바람 부는 대로 사는 형, 재능과 관록을 살리는 일거

리를 찾아 계속 일하는 형, 취미생활을 만끽하는 형, 그리고 자원봉사 또는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는 형 등으로 구분된다.

최근 6070세대들은 자원봉사의 길도 여의치 않은 오늘의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신업종들을 개발해야 한다고들 한다. 이들의 신업종의 종류가 다양할 수록 이 사회가 더욱 기름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경륜과 지혜 그리고 일하겠다는 의지는 이 나라의 버팀목이고 큰 자산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이다.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는 정부가 사람들을 지레 늙게 하는 분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